

“전남광주 AI산업, ‘분야별 강점 연결’이 해법”

국가 AI 예산 9조9334억…지역 주력산업 2조9171억
광주 모빌리티·의료·인재양성…전남 에너지 등 연계
전남연구원, 후속사업 패키지화·통합 실증플랫폼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관된 국가 인공지능 사업에서 662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에너지·해양수산·농업과 광주의 AI 기반시설·모빌리티·의료·인재양성 사업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AI사업 구조 분석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대응 방향’ JN1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 AI 사업 예산은 41개 부처, 741개 사업에 모두 9조9334억원이다. 사업 구조도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기술개발 위주에서 여러 부처와 지역이 참여하는 실증·확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남연구원이 전남광주의 주력산업과 741개 국가 AI사업을 연계해 분석한 결

과, 지역산업과 관련된 국가 예산은 2조 917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가 확보한 사업비는 6621억원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 전남은 에너지와 해양수산, 농업에서 관련 사업을 확보했다. 광주는 AI 기반시설과 모빌리티, AI 인재양성, 의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연구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두 지역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벗어나 산업과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성과 가시화와 후속사업 패키지화, 분야별 사업을 연결하는 통합플랫폼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사업은 후속 AI사업을 끌어오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통합특별시와 시·군·군이 역할을 나눠 공동사업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사업을 산업별 핵심 기능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와 장비, 실증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위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자율주행차 해상수출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광주권의 도시교통 실증 환경과 목포·여수권의 항만·물류 기능을 결합해 ‘AI 모빌리티·물류 통합 실증체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X 실증벨리는 에너지와 농업, 해양,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했다. 분야별로 분산된 데이터와 시설, 실증 결과를 공유하면 개별 사업의 성과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 국가사업을 확보하려면 다른 지역과 AI 기술이나 기반시설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전남광주만의 산업·사회적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높은 고령화율을 에이지테크와 돌봄 AI의 실증 환경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문제를 국가적 과제 해결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공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러 부처와 지역이 참여하는 AI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실·국

의 사업 기획과 내부 조정, 중앙부처 대응 기능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지원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전남과 광주가 각각 잡하는 분야를 개별적으로 키우는 데서 나아가 서로 다른 산업과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한 확장과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기획·조사·분석·평가를 전담하는 전문 출연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한정된 행정력을 국가정책과 지역 발전 효과가 큰 AI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규 기자 g3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촬영

김민석 “당원정비 TF·대통합 추진단 설치”

대표 직속 조직…단장에 박선원·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당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의 TF(테스크포스)인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종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도 꾸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를 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겹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표 직속의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

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4선의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가 설치된다.

진보 연대 분과는 진성준 의원이,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는 이혜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영입·확장 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에 공동위원장을 맡겼다.

김 대표가 직접 진보 성향 야당과의 통합 추진기구 설치를 지시해 향후 이들과의 통합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는 혁신당과의 통

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흡수 합당 방식의 합당을 언급했고,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에 민주·진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해 놓았다”며 “이종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한 당원들의 이종당적, 선천지 개입 의혹 등과의 통합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방

식 문제를 개선하는 ‘전당대회 평가 및 전당대회 제도 개선 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의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에 앞서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돼 연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브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집행부 정책보좌관 감감이 채용” 지적

기대서 “허위경력·제출서류 불일치…진상조사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가가 구정 운영에 핵심인 정책보좌관을 감감히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허위경력과 미비한 증명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대서 북구의회의원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보좌관 임용 과정에서 심각한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구는 민선 9기 신수정 북구청장을 보좌할 대외협력과 정책보좌관 각 1명을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으로 채용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정책보좌관으로 정책개발·소통·갈등관리·정부 분야 경력을 갖춘 구정 운영의 핵심이지만, 임용 과정에서 경력 여러 곳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격 요건이 정책개발 분야 경력을 요구하지만 정책보좌관로 채용된 A씨가 제출한 4개 법인 경력 중 3곳이 건설·부동산 대행업, 자산운용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A씨의 경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채용서류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을 대조한 결과 허위경력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의 재직 기간이 3년 넘게 차이 났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



가입자로 남아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는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회사에서는 직함이 ‘지점장’으로 적혀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상에서는 실제 직함이 상근하지 않는 타비상무이사임이라 표기되는 등 허위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북구 인사위원회의 부실한 검증도 질타했다.

그는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의 직위·인원·자격 기준을 사전 승인했다”며 “하지만 위원 8명은 ‘전문임기제 나급이면 5급 상당인가요?’라는 형식적 질문만 1건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전형과 면접에서도 대표이사 동시 교제, 주소·사무실 동일, 재직 기간 불일치가 검증됐는지 묻고 싶다”며 “북구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제출자료 간 재직 기간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자료의 성격과 재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채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더욱 세밀히 살펴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왕진, 혁신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당원 주권 시당” 전한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이 공식 출범하고, 서왕진 국회의원(사진)이 초대 통합시장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3000여당원의 은·오프라인 성원 속에 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서왕진 국회의원을 찬반투표 결과 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초대 시장위원장에 선출했다.

신장식 당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사순문 장흥군수, 20여 명의 지방의원, 지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당원대회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정신을 계승해 검찰개혁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 민생정치와 지역정치 혁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왕진 신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광주와 전남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혁신당이 호남 정치를 바꿔라’, ‘당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라’는 뜨겁고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당원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당원의 목소리가 시장 운영의 기준이 되는 ‘당원 주권 시당’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특별시의회, 사무감사 시민 제안 접수

위법 사항·예산 낭비 사례 등 의정활동 자료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층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안’을 접수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안은 행정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받아 이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누리집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에 접속한 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안’ 게시판에서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형곤 의장은 “시민이 제안해 준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귀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제1대 전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제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출

“지방의회법 제정·의정활동 현실화 최우선 과제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4일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순천6·사진)이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민호 신임 회장은 순천시의회에서 재선위원을 지내며 행정자치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뒤 전남도의회 제11·12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 이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왔다.

신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16개 시도의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기 중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과제를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신민호 회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1의원 1정책지원관’ 등을 제도화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의정비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정책·입법 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선하 기자 goback@